

여야 대치 격화, 길 잃은 경제정책

예산안·민생법안 ‘마비’

멈춰선 국회, 방치된 민생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유예 불투명 고준위 방폐장법 등 법안 모두 뒷전 아동수당 등 기본 예산안 기능 예상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의 후폭풍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모두 멈춰섰다.

계엄 선포 전만 하더라도, 야당이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감액분(4조1000억원)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여야가 협상을 완료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의 처리

를 촉구했다. 당정은 감액된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는 야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 처리나 준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감액 예산안이나 준예산을 수단으로 당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관련 본회의를 마친 뒤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거쳐 본회의의 통과를 노리는 민생경제 법안들도 ‘올스톱’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가 실시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는 불투명해졌다. 지난 정기국회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 종사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배제’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전력망 확충법’,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야당 주도로 추진하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서게 됐다.

12월 들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위원을 구성,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국 혼란 직격탄... 尹정부 ‘4+1 개혁’ 동력 상실

의료·교육·노동·연금 개혁, 좌초 위기 사의 줄이든 국무위원들, 국정운영 불능

비상계엄 사태와 야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상정 등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및 저출생 대응 정책(4+1 개혁)은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했어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95명(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국민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김예지·김상욱 의원 포함)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가까스로 탄핵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샀고, 이후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명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1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의

정갈등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의료계와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특히 의료계는 포고령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5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된 데 이어 의료계와 대화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및 탄핵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 논의마저 멈추면서 의료개혁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당장 2025학년도에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2026년도부터는 예년 수준(3058명)으로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대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마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연금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논의는 어려워졌다. /서예진 기자 syj@

정치 불안에 내수 한파까지... 유통가, 사라진 연말 대목

소비 심리 위축에 소비자 발길 끊겨 고환율로 식품업계 원자재 부담 가중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유통·식품·호텔 업계로 번지고 있다.

통상 연말은 유통업계의 대목으로 꼽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내수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유통업계의 전반적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더해져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사태의 악영향이 내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

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탄핵 정국 당시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이슈가 이어진 2016년 말~2017년 3월까지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줄곧 기준선 100 이하로 나타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점 100보다 높으면 낙관론이, 낮으면 비관론이 우세한 것으로 본다. 당시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세로 돌아선 기점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였으며, 정상화가 되기까지 세 달이 걸렸다.

2016년 당시 연말 정기세일을 열었음에도 롯데백화점은 전년 행사 대비 매출이 0.7% 감소했고 현대백화점은 1.2% 줄어들었다. 통상 유통업계에서는 크리스마스 등의 연말 쇼핑 시즌이 있는 4분기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대목으로 꼽힌다.

이에 주요 백화점들은 정상영업을 유지하되, 정치적 혼란이 소비자 심리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집회·시위가 대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주차 관리와 보안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도 경찰과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변 상황을 점검 중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현재까지는 영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비책을 검토 중이다.

e커머스·물류업계 역시 정국 불안이 소비자 심리 위축과 배송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 혼잡과 택배 기사 이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편의점 업계도 주요 도시에서 집회·시위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집회 지역 인근 점포에서는 생수, 방한용품, 즉석 조리식품 등 필수 물품의 안정적 수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업계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환율 수준을 1450원대로 보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국정 혼란에 따라 원화 환율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